법인에 대한 협박죄의 필요성과 정당성

김 현 조*

국 | 문 | 요 | 약

최근 대법원은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대법원 2010.7.15. 선고 2010도1017 판결), 그 논거로 ‘형법규정 체계’상의 문제, ‘보호법익’상의 문제, ‘협박의 행위개념’상의 문제를 들었다. 그러나 단순히 제정당시의 형법전상 편재만을 근거로 개별 조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자동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 협박죄의 보호법익인 ‘의사결정의 자유’에서 말하는 ‘의사’의 의미를 심리적 방법이 아닌 규범적 고찰방식에 따라 ‘자기영역구축권’으로 이해한다면 법인도 의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공포심의 야기’를 단순히 두려워하는 감정의 유발이 아니라,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침해될 것에 대한 우려의 야기로 이해한다면 법인도 공포심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논거의 타당성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대법원의 입장처럼 법인이 협박죄의 객체가 되는지에 관하여 직접 해악의 고지를 받은 자연인의 법인과 밀접한 관련성, 특히 법인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을 기준으로 한다면, 해악의 고지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협박죄의 성립범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한편 인질강요죄에서 강요의 객체에 법인이 포함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강요죄의 객체에 법인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범죄들도 ‘의사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볼 때 협박죄의 객체에도 법인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관된 해석일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여러 사람에게 동일한 해악을 내용으로 하는 협박을 한 경우의 죄수판단에 있어서도 법이론적 측면이나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죄수판단의 불합리성은 협박죄의 객체를 법인으로 봄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형법의 해석에 있어서 정합성, 협박죄의 성립범위 판단에 있어서 합리성 등을 위해서라도 법인을 협박죄의 객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나아가 입법론적으로는 형법각칙의 개별 범죄의 구성요건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에 법인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사람(법인을 포함)’이라고 개정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적절해 보인다. 이러한 입법론적 해석을 통하여 불필요한 해석상의 논쟁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주제어 : 협박, 법인, 공포심, 의사결정의 자유, 인질강요

* 법학박사,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I. 들어가는 말

현대사회의 인간은 어떠한 형태이건 조직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생활하고 있으며, 심지어 조직 또는 단체에 소속되지 않고서는 현대사회의 생활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개인의 의사 역시 단체의 의사를 통해서 표출되고, 이를 통해 개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보다 쉽게 성취할 수도 있다. 산업사회가 고도로 조직화되고 법인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이 확장될수록 개인의 존재는 조직이나 단체와 일체화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대사회에 있어서 법인의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활동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법인의 범죄주체성뿐만 아니라 법인의 범죄피해자성¹⁾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형법각칙에 규정된 여러 개별 범죄(예컨대 명예훼손죄, 신용훼손죄 등)의 해석에 있어서 비록 구성요건에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법인도 행위의 객체 혹은 피해자가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특히 법인이 협박죄의 객체 혹은 피해자²⁾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고,³⁾ 그 당부에 대한 해석론적 접근은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이 과연 실정법적 해석으로 타당하며, 형사정책적 관점에서도 합리적인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아래에서는 먼저 대법원이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제시한 논거, 즉 ‘형법규정 체계’상의 이유, ‘보호법익’상의 이유, ‘협박의 행위개념’상의 이유들

- 1) 임석원, 법인의 범죄능력인정을 위한 새로운 해석의 필요성 -기업의 생명침해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71권(2007), 79쪽 이하; 임석원, 범죄피해자로서 법인의 본질: 모욕죄와 협박죄를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제16권 제1호(2008), 229쪽 이하; 임석원, 법인의 범죄능력 -행위객체측면에서의 접근을 중심으로, 법학논집 제31권 제1호(2009), 139쪽 이하; 清水洋雄, 法人を被害者とする犯罪の成否-侮辱罪と脅迫罪を参考にして, 現代社会型犯罪の諸問題, 勤草書房(2004), 65頁 以下; 清水洋雄, 被害者としての法人, 日本法学 第76卷 第4号(2011), 179頁 以下 등 참조.
- 2) 범죄에 따라서 행위객체와 피해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삼각사기에 있어서 행위의 객체와 피해자는 다르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인 법인’이라고 구별함으로써, 행위의 객체와 피해자를 동일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협박행위, 즉 해악의 고지를 받은 대상인 ‘객체’와 그러한 행위를 통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된 ‘피해자’를 동일한 의미로 파악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 3) 대법원 2010.7.15. 선고 2010도1017 판결.

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보고(II), 법인을 협박죄의 객체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협박죄 성립범위의 불합리성, 인질강요죄의 해석론과의 부정합성, 그리고 죄수관계의 판단에서 발생하는 불합리성에 관하여 논구해 보고자 한다(III). 마지막으로 특히 법인이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해석론의 논거 중의 하나인 ‘행위의 객체와 가해의 대상의 구별’에 대하여 검토해 봄으로써(IV), 형법상 개별범죄에서 법인과 관련한 올바른 해석론의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개별범죄의 입법론적 활동에 단초를 제공해 보고자 한다.

II. 대법원의 입장과 그 논거의 타당성 여부

1. 법인에 대한 협박죄의 성부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은 채권추심 회사의 지사장이 본사에 서면을 보내 협박하는 한편, 상무이사에게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전화로 얘기한 사인⁴⁾에서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형법규정의 체계상 개인적 법익, 특히 사람의 자유에 대한 죄 중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협박죄의 보호법익, 형법규정상 체계, 앞서 본 협박의 행위 개념 등에 비추어 볼 때, 협박죄는 자연인만

- 4) 자세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0. 1. 1.경부터 2006. 11. 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상세주소 생략)에 위치한 채권추심업체인 ‘공소의 1 주식회사(대법원 판결의 공소의 주식회사)’의 수원·서경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 2006. 10. 31.경 인천 남구 (상세주소 생략)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횡령행위가 적발되어 공소의 1 주식회사로부터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당하게 될 상황에 처하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지사장 보충금, 주식 양도대금, 프렌차이즈 운영체제, 예수금 현황, 분식회계, 금감원 감사 등’의 문제를 고발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공소의 1 주식회사 본사에 팩스로 송부한 후 공소의 1 주식회사 경영지원 본부장인 피해자 공소의 4에게 전화하여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등에 고발 문서를 보내겠다.”고 말하고, 2006.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합의서 작성 즉시 서경지사 새마을금고 통장 잔액을 피고인에게 입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팩스로 보내면서 서명하도록 하여, 만일 이에 응하지 않으면 위 피해자의 재산 또는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다(인천지방법원 2009.12.29. 선고 2009노552 판결).

을 그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을 뿐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⁵⁾라고 판시 하면서, 법인의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할 것인데, 피해자 본인에게 법인에 대한 법익을 침해하겠다는 내용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 피해자 본인에 대하여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정도가 되는지 여부는 고지된 해악의 구체적 내용 및 그 표현방법, 피해자와 법인의 관계, 법인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와 역할, 해악의 고지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법인의 활동 및 경제적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⁶⁾ 하면서, 법인은 고지된 해악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주체, 즉 제3자에는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을 정리하면, 우선 법인은 협박죄의 형법규정 체계상의 이유, 협박죄의 보호법익상의 이유, 그리고 협박이라는 행위개념상의 이유로 협박죄의 객체(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지된 해악의 내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법인이 협박죄의 제3자에는 포함된다는 것이다. 먼저 법인이 협박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 이유로 대법원이 제시한 논거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를 살펴 보기로 한다.

5) 대법원 2010.7.15. 선고 2010도1017 판결, 3쪽.

6) 대법원 2010.7.15. 선고 2010도1017 판결, 1-2쪽.

2. 대법원이 제시한 논거의 타당성 여부

가. 형법 규정 체계의 관점

대법원은 법인에 대한 협박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논거로 우선 형법 체계론상의 이유를 들고 있지만, 어떤 체계상의 이유인지를 자세히 밝히지 않고 있다. 형법 해석론에서는 당해 규정의 체계적 지위를 중시해야 하고, 협박죄는 소위 ‘신체의 자유에 대한 죄’로서 체포·감금죄나 약취·유인죄와 나란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협박죄의 객체로 예정된 것은 ‘자유’의 주체인 자연인이라고 보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해석이며, 법인 등의 영업활동의 보호라는 정책적인 이유를 들어 형법 체계상의 정합성을 붕괴시켜 협박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해석론상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주장⁷⁾이 대법원이 생각하는 체계상의 이유로 보인다.

그렇다면 입법자의 분명한 의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행 형법상 협박죄의 제정과정에 대해 우선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구형법은 제222조에 협박죄를 규정하여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제223조에 강요죄를 규정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다. 또한 협박죄의 가해대상을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외국의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협박죄의 미수 처벌규정은 두지 않았고 강요죄의 미수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며, 친고죄 규정을 두고 있었다.⁸⁾

조선법제편찬위원회의 형법 기초요강에 따르면, 당시 입법자는 제32장 체포 및 감금죄, 제33장 약취 및 유괴죄, 제34장 간음죄 순으로 규정하고, 제35장에 협박죄를 규정하고, 협박죄에 ‘面談強要強談繼續 等’을 처벌하는 조문을 신설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형법초안에서는 현행 형법과 마찬가지로 체포 및 감금죄와 약취 및 유인죄 사이에 협박죄를 위치시켰다.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제306조 ‘면회를 強請하거나 嚴談 또는 威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2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규정은 제303조(협박)를 가지고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되었다.⁹⁾

7) 森本益之, 法人に対する脅迫罪の成否, 判例時報 1250号(1987), 220頁.

8) 유기천, 형법학(각론강의)-영인본, 법문사(2012), 99쪽; 강서룡, 신형법요의, 법제신보사(1954), 337쪽.

이러한 신형법의 제정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협박죄의 편재에 관하여 약간의 이견이 있었다는 것과, 국회의 논의 과정까지는 협박죄의 객체를 ‘타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제정된 형법에서는 그 객체가 ‘사람’으로 바뀌어 있다는 점¹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러한 적지 않은 의미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나 논의의 과정에 대한 자료가 없으므로 정확한 입법자의 의사는 확인할 수 없다.

한편 우리의 구형법은 곧 일본 메이지시대의 형법(1907年)을 의미하므로, 이와 관련한 일본 형법의 제정과정에서의 논의가 우리 형법의 입법자의 의사를 확인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의 판례와 동일한 취지로 법인에 대한 협박죄의 성립을 부정한 일본 재판소의 판례¹¹⁾가 논거로 들고 있는 것은 조문상의 위치, 체계적 지위 등이며, 이는 달리 말해 입법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일본의 해석론 중에서도 법령의 입안 당시의 심의 과정을 살펴볼 때 논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졌는지 의심스럽기 때문에 조문체계상의 지위, 즉 입법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것을 근거로 법인에 대한 협박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¹²⁾이 있다. 또한 일본의 형법 제정 당시에는 주거침입죄, 비밀침해죄, 강제추행죄, 강간죄 등을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로 보았지만, 현행

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법령제정자료집(1) 형법(1990), 11, 14, 19, 66, 479쪽.

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앞의 책, 672, 673쪽.

11) “형법 제222조의 협박죄는 형법체계상 생명, 신체에 대한 살인의 죄, 상해의 죄에 이어서 인신의 자유에 대한 죄로서, 체포·감금의 죄 및 약취·유인의 죄와 나란히 양자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사람의 의사활동의 평은 내지 의사결정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나아가 동조 각항의 문언자체도 참조한다면, 동조 1하의 협박죄는 자연인에 대해 그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을 고지한 경우에 한해서 그 성립이 인정되고, 법인에 대해 그러한 법익에 위해를 가할 것을 고지한다고 해도 그로 인해서 법인에 대해 동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러한 법인에 대한 가해의 고지가 나아가 그 대표자, 대리인 등으로서 현재 그 고지를 받은 자연인 자신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가해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만 그 자연인에 대한 동죄의 성립이 긍정된다.”(大阪高判 昭和61·12·16 判時 1232号 160頁)

12) 일본 형법 제정과정에서 협박죄의 객체에 법인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이라는 문언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만일 삭제한다면 협박을 받은 자에게 속하지 않은 법익에 대한 해악의 고지도 협박죄가 되므로, 일본 형법 제222조 제2항이 무의미하게 된다는 반론이 제기되자 논의가 성숙되기 전에 최종적으로 부결되었다고 비판한다{松澤伸, 法人に対する脅迫強要罪の成否(二·完), 早稲田法学 80卷4号(2005), 71頁}.

형법은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로 본다는 것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체계상의 위치, 즉 조문의 편재를 필요 이상으로 중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¹³⁾도 있다. 일본의 판례가 제시한 이러한 논거는 새롭게 발생하는 법률해석의 문제를 기능적으로 해결하기보다 형법전상의 단순한 조항의 배열을 형법체계라고 부르며 이를 과도하게 중시하는 것이며, 결국 형식적 문언을 중시함으로써 형법의 사회통제기능을 약화시키거나 경직되게 할 것이라는 비판¹⁴⁾도 있다.

일본 형법 제정과정에서의 논의와 일본의 판례가 제시한 형법체계상의 논거에 대한 해석론의 비판에 비추어 볼 때, 우리 형법의 제정과정에서도 편재에 관한 이견과 객체에 관한 문구 변경의 의미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형법이 제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법인이 협박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단순히 형법전상의 편재만을 근거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나. 보호법익의 관점

대법원이 법인에 대한 협박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보호법익의 문제이다. 즉,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가질 수 없는 법인을 제외한 자연인만을 그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박죄의 보호법익에 관하여 종래에는 개인의 법적 안전 의식이라는 주장¹⁵⁾이 있었지만, 현재의 지배적인 입장은 협박죄는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의 전제가 되는 정신적 의사의 자유, 즉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는 범죄로 보고 있다.¹⁶⁾ 나아가

13) 清水洋雄, 被害者としての法人, 日本法学 76卷4号(2011), 187-188頁.

14) 松澤伸, 前掲論文, 72-73頁.

15) 서일교, 형법각론, 박영사(1982), 65쪽; 황산덕, 형법각론, 방문사(1989), 207쪽; 김종원, 형법각론(上), 법문사(1971), 97쪽; 정영석, 형법각론, 법문사(1983), 249쪽; 이건호, 신호 형법각론, 일신사(1975), 249쪽.

16) 권오걸, 스마트 형법각론, 형설출판사(2011), 87쪽; 김성돈, 형법각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2009), 113쪽; 김일수, 한국형법Ⅲ(각론 上), 박영사(1997), 253쪽; 김일수/서보학, 새로쓴 형법각론, 박영사(2009), 120쪽;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2011), 96쪽;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2010), 196쪽;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2010), 134쪽;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2012), 110쪽; 이정원, 형법각론, 신론사(2012), 120쪽;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2011), 134쪽; 정성근/박광민, 형법각론, 삼영사

협박죄의 보호법익을 ‘의사결정의 자유’라고 본다면,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¹⁷⁾

협박죄의 보호법익을 다수의 입장처럼 ‘의사결정의 자유’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법인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가질 수 없는 존재로서 협박죄의 객체에 포함될 수 없다고 단언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사결정의 자유에서 말하는 ‘의사’가 어떠한 의미인지가 먼저 논구되어야 할 것이다. 즉, 협박죄의 보호법익인 ‘의사결정의 자유’에서 ‘의사’를 어떠한 의미로 이해할 것인지에 따라 법인도 자유의 대상인 ‘의사’를 가질 수 있는지, 나아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협박에서 말하는 ‘해악’의 의미를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조종하기 위한¹⁸⁾ ‘가치의 침해 또는 손해의 부과’로¹⁹⁾ 이해한다면, 법인은 분명히 그러한 심리적으로 이해되는 ‘의사’를 가질 수는 없다고 볼 수 있고,²⁰⁾ 법인에게는 그러한 의사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법인은 협박죄의 행위객체가 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심리적 접근방법이 아닌 규범적 접근방법, 즉 ‘법적으로 보장된 자유의 불리한 변경 혹은 침해’를 협박죄의 불법으로 특징짓는 규범화된 고찰방식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면 입법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방법은 사뭇 달라져야 할 것이다.²¹⁾

(2011), 127쪽 등.

17) 권오걸, 앞의 책, 89쪽; 김성돈, 앞의 책, 115쪽; 김일수, 앞의 책, 255쪽; 박상기, 앞의 책, 96쪽; 배종대, 앞의 책, 197쪽; 이재상, 앞의 책, 112쪽; 이정원, 앞의 책, 122쪽; 임웅, 앞의 책, 135쪽; 정성근/박광민, 앞의 책, 129쪽 등.

18) BGH NStZ 1987, 222 (223); Bergmann, Das Unrecht der Nötigung (§240 StGB), 1983, 127ff.; Lackner/Kühl, Strafgesetzbuch, 22. Aufl.(1997), §240 Rdn. 13; Tröndle/Fischer, Strafgesetzbuch und Nebengesetz, 49. Aufl.(1999), § 240 Rdn. 17.

19) Schönke/Schröder-Eser, Strafgesetzbuch, 25. Aufl.(1997), § 240 Rdn. 9.

20) 따라서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독일의 개정 전 형법 제240조에서는(Menschen이 아니라 eine andern으로 규정되어 있었음에도) 단지 ‘사람’(Menschen)만이 가능한 강요의 피해자였던 것이다. 예를 들면 Schönke/Schröder-Eser, Strafgesetzbuch, 25. Aufl.(1997), § 240 Rdn. 2. 참조.

21) 기본적으로 강요를 보장된 권리들의 침해로서 이해하는 것으로는 Jakobs, Peters-FS, S. 69ff.; Jakobs, H. Kaufmann-GS, S. 791ff. 그리고 Timpe, Die Nötigung, 1989 등이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경우로는 Amelung, GA 1999, 182, 191ff.; Kindhäuser, Strafrecht BT II/1, 2. Aufl.(1999), § 12 Rdn. 5ff.; Lesch, JA 1995, 889ff. 그리고 Horn, in: SK-StGB, 6. Aufl.(1998), §240 Rdn. 2ff. 등이 있다. 최근의 비판적 입장으로는 Herzberg, GA, 250, 254ff.가 있다.

즉, 협박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보장하고자 하는 자유의 내용을 ‘자기책임 하에 하나의 구성·조직’영역을 형성할 권리’(Recht auf eigenverantwortliche Gestaltung eines Organisationskreises), 즉 자기영역구축권²²⁾으로 이해한다면, 협박죄의 피해자는 구성·조직에 대해 권리를 가지고 이러한 구성·조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자로 볼 수 있다. 나아가 귀속 가능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 권리를 행사한 자도 당연히 그러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인도 구성·조직영역의 형성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²³⁾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협박을 통하여 법인이 가지는 그러한 자유를 침해한 경우에는 법인이 피해자, 즉 협박죄의 직접적인 객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법인과 자연인은 의사결정, 사회적 실재성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법인이 협박죄의 객체가 된다고 하는 주장²⁴⁾은 법인이 사회생활상 가지는 역할과 지위를 적절히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법인은 구성원을 넘어선 사회적 실재로서 법적인 의미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의사를 가질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것이며, 자신의 의사결정기관을 가지고 그 기관의 의사결정에 기초하여 활동하는 사회생활상의 존재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법인이 조직체로서 의사결정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고 보는 이상, 그러한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도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또한 현대사회에서는 다수의 인간이 어떤 조직에 속하고 그 조직체로서의 활동에 종사,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조직의 활동에 대한 해악의 고지는 그 조직 자체에 대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현상으

22) ‘Organisationskreis’라는 용어가 가지는 의미를 부각시켜 옮긴다면, 권리의 주체가 자기의 책임 아래에서 구성·조직하고 운영하는 영역에 대한 자유, 즉 자기영역구축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3) Jakobs, H. Kaufmann-GS, S. 791, 803; Kindhäuser, Strafrecht BT II/1, 2. Aufl.(1999), § 12 Rdn. 15; Wallau, JR 2000, 312ff.

24) 임석원, 범죄피해자로서 법인의 본질, 240쪽; 野村稔, 脅迫罪, 刑法学 4 <各論の重要問題>(西原春夫/藤木英雄/森下忠 編), 有斐閣(1977), 107頁; 河村博, 法人等に対する脅迫といやがらせ, 商事法務1122号(1987), 33頁; 坪井宣幸, 実務刑事判例評釈 [30], 警察公論52卷1号(1997), 131頁; 今井猛嘉, 刑法における法人の地位, ジュリスト増刊・刑法の争点(第三版), 有斐閣(2000), 128頁; 但木敬一/坪内利彦/馬場義宣/古田佑紀, 実務刑法(三訂版), 立花書房(2002), 326-327頁; 板倉宏, 刑法各論, 勁草書房(2004), 62頁; 西田典之, 刑法各論(第4版), 弘文堂(2007), 65頁.

로서 사회적 실체와 협박이라는 법문의 진정한 의미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오래 전에 대법원도 “법인은 하나의 실재로서 고유의 의사에 따라 대표기관에 의하여 행동하는 주체이므로 법인은 독자의 의사를 지니고 이로써 의사를 결정하고 법적 효력 있는 행위를 하기 위한 기관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법인에 행위 능력이 있다는 것이 되나니, 이와 같이 법인은 기관에 의하여 독자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실재체이므로 기관의 행위는 즉 법인 자체의 행위가 되고, 다만 법인의 기관은 법인의 목적범위 내의 행위어야 된다는 제한이 있을 따름이다.”라고²⁵⁾ 판시하면서, 법인이 고유의 의사를 지닌 사회적 실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처럼 ‘의사’의 의미에 관한 규범적인 고찰방식과 법인의 실재성에 관한 현실적인 측면을 감안하면, 법인도 당연히 의사결정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주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협박죄의 보호법익을 근거로 법인에 대한 협박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대법원의 논거는 그리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없어 보인다.

다. 행위개념상의 관점

대법원이 법인에 대한 협박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또 하나의 논거는,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행위의 개념상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²⁶⁾ 이러한 협박행위의 핵심적 요소를 해악의 고지로 인한 ‘공포심 야기’로 파악함으로써 법인은 그러한 공포심을 가질 수 없다는²⁷⁾ 것을 그 근거로 하는 것이다. ‘협박죄의 본질은 공포심을 야기함으로써 사람을 불안에 빠지게 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점에 있다.’는 주장²⁸⁾이나, ‘협박죄가 (강요죄와 동일한 의미에서) 의사결정의 자유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는 아니고, 해악의 고지에 의하여 법익이 침해될 것이라는 공포심을 생기게 하여 의사결정의 자유에 대한 위협을 야기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는 이상, 본죄의 객체를 의사의

25) 대법원 1978.2.28. 선고 77누155 판결.

26) 대법원 2010.7.15. 선고 2010도1017 판결;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27) 한영수, 앞의 논문, 351쪽.

28) 大谷實, 法人に対する脅迫罪の成否, 法学セミナー 393号(1987), 135頁.

자유를 향유하는 주체로서의 자연인에 한한다고 해석하고, 법인의 영업활동은 기본적으로 업무방해죄나 신용훼손죄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²⁹⁾도 대법원의 입장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러한 주장들은 협박행위의 본질적 요소가 ‘공포심의 야기’라고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협박죄의 성립에는 현실적으로 공포심이 생길 필요는 없다는 의미에서 볼 때, 법인에 대한 협박죄도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개인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을 해한다는 공포심’이 문제되는 이상 법인에 대한 협박죄의 성립은 고려될 수 없다는 주장도³⁰⁾ 있다. 나아가 법인에 대한 강요죄의 성부와 관련하여 ‘강요죄는 협박, 폭행을 수단으로 해서 피해자의 공포심(안전감의 위태화)을 야기하여 작위, 부작위를 강요한다는 점에 본질이 있으므로, 안전감을 위협할 수 없는 법인은 강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는 주장도³¹⁾ 결국 법인은 공포심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주된 근거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포심의 사전적 의미는³²⁾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이다. 우선 형법에서 협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협박행위, 즉 공포심의 야기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공포심의 야기인지에 관하여 고찰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전형적으로는 피협박자가 자신의 혹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에 대하여 느끼는 공포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공포심을 그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 느끼는 단순한 감정, 즉 심리상태라고 본다면 당연히 법인은 그러한 공포심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의 법익과 관련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자유에 대한 침해의 우려라는 의미로 공포심을 이해한다면, 법인도 공포심을 느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공포심을 자유로운 활동에 대한 전제로서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할 자유가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로 파악한다면, 법인도 공포심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서 협박죄의 직접적인 보호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지배적 견해가 협박죄의 보

29) 大塚裕史, 法人に対する脅迫, 新判例マニュアル刑法II各論(香川達夫/川端博 編), 三省堂(1998), 55頁.

30) 前田雅英, 法人に対する脅迫罪, 最新重要判例250 刑法, 弘文堂(2011), 142頁.

31) 山中敬一, 刑法各論 I, 成文堂(2004), 118頁.

3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

호법익을 ‘의사결정의 자유’라고 보면서, ‘사람의 의사가 부당한 외부적 간섭을 받지 아니할 자유’나 ‘개인의 의사가 부당한 외부적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상태’라고 설명하는 것³³⁾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심리상태를 보호하는 것인지(의사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인지는 구별해야 한다. 감정이 없는 법인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의사의) 자유가 없는 법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수의 주장처럼,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인이 느끼는 감정적 공포심과 동일한 의미에서의 공포심을 일으킨다고 하는 심리상태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공포를 감정심리학에서의 정의, 즉, ‘어떠한 자극에 대해서 생활체가 방어반응을 보인 경우에 가정된 내적 반응인 매개념’이라는³⁴⁾ 정의에 의할 때, 그와 같은 반응은 조직 전체, 즉 법인에게도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소결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이 법인에 대한 협박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근거로 제시한 3가지 논거들은 그 타당성이 의심스럽다. 우선 형법체계상의 정합성이라는 논거는 형법전상의 단순한 조항의 배열이나 문언만을 과도하게 중시하는 것으로서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입법자의 의사를 존중하자는 것에 불과하고, 현재 우리사회에 나타나는 각종 사회현상들을 반영해야 할 법해석의 기준들을 60여 년 전의 상황으로 회귀시키는 시대착오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법인은 ‘의사결정의 자유’를 가질 수 없다는 대법원의 두 번째 논거 역시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의사’의 의미를 심리적 방법인 아닌 규범적 고찰방식에 따라 ‘자기영역구축권’으로 이해한다면 법인도 의사결정의 자유를 충분히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법인은 고유한 의사에 따라 독자적인 행

33) 박상기, 앞의 책, 96쪽; 배종대, 앞의 책, 196쪽; 이재상, 앞의 책, 112쪽; 임웅, 앞의 책, 135쪽; 정성근/박광민, 앞의 책, 129쪽. 협박죄의 보호법익을 ‘의사결정의 자유’로 보는 다수설적 입장도 소수설에서 말하는 ‘법적 안전감’의 의미를 내포하여 설명하고 있으므로, 협박죄의 보호법익에 관한 논의는 실익이 없다는 주장(박달현, 협박죄의 성질과 기수시기에 관한 체계적 고찰, 저스티스 통권 제127호(2011), 379-380쪽)은 주목할 만하다.

34) 今田寛, 感情心理学 第三卷・恐怖と不安, 誠信書房(1975), 22頁.

위를 할 수 있는 실체체'라고 판시함으로써 법인과 자연인은 의사결정, 사회적 실재성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는 것을 긍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공포심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이라는 단순한 감정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자유로운 활동에 대한 전제로서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할 자유가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로 이해한다면, 법인도 공포심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서 협박죄의 직접적인 보호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법인이 협박죄의 객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입장에 따른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들에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법인에 대한 협박죄의 성립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에 관해서 논구해 보기로 한다.

III. 법인에 대한 협박죄의 인정 필요성

1. 협박죄 성립판단의 객관성과 일관성

법인을 협박죄의 객체로 보지 않는 대법원의 논리에 따른 때,³⁵⁾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지를 몇 가지 사례를 통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사례1〉 갑은 평소 A법인에 대해 불만을 가져오던 중 B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 을에게 'A법인의 본사 건물을 폭파해 버리겠다!'라는 협박을 하였으나, 평소 대범하기로 소문난 경찰관 을은 전혀 공포심을 갖지 않았다.

35) 협박죄의 보호범위, 보호정도, 그리고 그에 따른 미수범의 성립범위에 대한 대법원 입장의 타당성 여부에 관한 검토는 다음 기회로 미루어 두기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법원의 결론에 따른 때 발생하는 문제만을 다루기로 한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상세한 논의에 관해서는 허일태, 협박죄의 성질과 기수시기", 동아법학 제41호(2008), 273쪽 이하; 하태훈, 협박죄의 범죄구성요건 유형, 형사판례연구(16), 박영사(2008), 81쪽 이하; 김성돈, 침해범/위협범, 결과범/거동범, 그리고 기수/미수의 구별기준, 형사판례연구(17), 박영사(2009), 1쪽 이하; 최동렬,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기 위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요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74호(2007 하반기), 법원도서관(2008), 421쪽 이하; 김정환, 협박미수죄에 관한 검토, 한국형사법학의 이론과 실천: 정암 정성진박사 고회기념논문집, 한국사법행정학회(2010), 407쪽 이하; 한영수, 협박의 의미와 대상, 형사판례연구(19), 박영사(2011), 326쪽 이하 등 참조.

〈사례2〉 갑은 평소 A법인에 대해 불만을 가져오던 중 A법인에 전화를 걸어 A법인의 전화교환원인 을에게 ‘A법인의 비리를 언론에 유포하여 망하게 하겠다!’라는 협박을 하였고, 잔뜩 겁을 먹은 을은 자동 녹음된 전화내용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사례3〉 갑은 평소 A법인에 대해 불만을 가져오던 중 A법인의 대표이사 을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A법인의 비리를 언론에 유포하여 망하게 하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사례1>의 경우에 해약의 고지가 ‘제3자’의 법익 침해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A법인과 피협박자인 을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은 ‘고지된 해약의 구체적 내용 및 그 표현방법, 피해자와 법인의 관계, 법인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와 역할, 해약의 고지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법인의 활동 및 경제적 상황 등’을³⁶⁾ 이러한 밀접한 관계의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기준에 따를 때, <사례1>의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가 인정될 수 없어 보이므로 협박죄의 기수범은 성립할 수 없지만, 협박죄의 보호정도와 그에 따른 미수범의 인정범위에 관한 판례³⁷⁾의 논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약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이기 때문에 협박죄의 미수범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³⁸⁾ 이처럼 <사례1>의 경우에 협박죄의 미수범 성립을 긍정한다면, 협박죄의 객체를 누구로 볼 것인가가 의문스럽

36) 대법원 2010.7.15. 선고 2010도1017 판결, 2쪽.

37) 대법원 2007.9.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38) 최근 대법원은 ‘피고인이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갑 정당이 국회에서 예산안을 강행처리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갑 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갑 정당에 관한 해약을 고지한 것이므로 각 경찰관 개인에 관한 해약을 고지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갑 정당에 대한 해약의 고지가 각 경찰관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협박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8.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기존 판례의 취지에 따라 과연 협박미수를 긍정하였는지, 아니면 무죄를 선고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 법인과 밀접한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혀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던 피협박자를 협박죄의 객체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사례2>와 <사례3>의 경우도 <사례1>과 마찬가지로, A법인에 대한 해약의 고지를 을에 대한 협박으로 보기 위해서는 양자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이 제시한 밀접한 관계의 존부 판단에 관한 기준 중 ‘법인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은 피협박자가 법인의 기관인지 아니면 단순한 일반직원인지에 따라서 밀접한 관계의 유무가 달라진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기준으로 밀접한 관계의 존부를 판단하게 되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사례3>과 같이 협박 전화를 받은 사람이 대표이사, 전무이사 등 법인의 기관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협박죄의 객체로 인정되어 협박죄의 기수범이 성립하지만, <사례2>와 같이 기관이 아닌 일반직원이 법인에 대한 해약을 고지하는 전화를 받은 경우에는 비록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약을 고지’라고 하더라도 법인과는 밀접한 관계가 없으므로 협박죄의 기수범이 성립되지 않게 된다. 즉, 대법원의 판시취지에 따르면, <사례2>의 경우에는 협박죄의 미수범이 성립하고, <사례3>의 경우에는 협박죄의 기수범이 성립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법원의 해석기준은 협박전화를 받은 사람이 법인의 기관인지 혹은 기관이 아닌 일반직원인지와 같은 우연적인 사정에 따라서 협박죄의 기수범인지 미수범인지가 좌우되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법인을 협박죄의 객체로 본다면, 위의 사례들에 대한 해석론의 간결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범죄성립의 가부와 범위의 불합리성을 제거할 수 있다. 즉 <사례1>에서는 협박죄의 객체인 A법인에 대하여 협박을 고지하였으나, 상대방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협박죄의 미수범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 <사례2>와 <사례3>과 같은 경우에도 법인 자체를 협박죄의 객체로 보면 사안의 본질에 부합하고 일관된 법해석·적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법인 자체를 협박죄의 객체로 본다는 것은 법인과 동일시되는 자연인, 즉 법인의 대표이사 등의 기관인 자가 업무에 관하여 행하는 행위는 법인 자신의 행위로 본다는 소위 ‘동일시이론’³⁹⁾의 관점에서보다는 기업조직체책임론을 바탕으로 한 ‘기업조직체행위론’⁴⁰⁾에 따르는 것이

39) 松原久利, 法人の刑事責任-自然人を媒介としたアプローチ, 刑法雑誌 41卷1号(2001), 39頁.

타당할 것이다. 즉, 법인이 범죄의 주체인 경우에 자연인을 매개로 한 것이 아닌 기업조직체 그 자체가 범죄의 주체가 되는 것처럼, 법인이 범죄의 객체인 경우에도 기업조직체를 일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기업 내부의 자연인을 매개로 한 것이 아니라 기업조직체 그 자체가 직접 피해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말단의 직원이 기업 활동에 관해서 협박을 받은 경우에도 기업에 대한 협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법인을 협박한 가해자의 입장에서 접근하더라도 어떠한 불리한 해석도 될 수 없다. 법인을 협박하는 자는 기관에 대해서 협박행위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어떠한 협박의 고지·전달을 선택했는가에 따라 당연히 그 상대방은 일반 직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결국 법인에 대한 협박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⁴¹⁾

2. 인질강요죄의 해석론과의 정합성

형법 제324조의2에 규정된 인질강요죄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이다. 사람을 체포·감금, 또는 약취·유인한 후에 이를 인질로 삼아 체포를 면하려고 하거나 정치범의 석방을 요구하거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사범을 무겁게 벌하기 위하여⁴²⁾ 1995년 개정 형법에 신설된 규정이다. 인질강요죄는 체포·감금죄 또는 약취·유인죄와 강요죄의 결합범으로서, 제3자

40) 이 견해는 법인의 독자적 성질을 고려하여 법인의 범죄능력을 증명하는 입장으로 ‘법인이 개개의 구성원을 초월한 사회적 실체이며, 그 조직체로서의 활동이라는 것은 전(前)범률적인 사회적 현실이다. … 법인 등 기업체의 조직 활동을 행하는 자연인의 행위는 동시에 법인 등 기업체 자체의 행위의 한 단면으로 보는 것이 전범률적인 사회통념이 아닐까? … 또한 법인 등 기업체는 기관 활동을 통해서 법률적으로 법인으로서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범률적으로 기업조직체로서의 의사형성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집단적인 의사형성에 대한 사회 윤리적 비난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며, 또한 ‘기업체의 조직활동을 전일체적으로 기업체의 행위로서 취급하여-기업조직체행위개념- 그 활동이 위법하여 형사제재가 필요한 때에는 기업체 자체를 가별적 위법활동의 주체, 즉 범죄의 주체로 하는 기업체책임론’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은 板倉宏, 企業犯罪の理論と現実, 有斐閣(1975), 27-35頁 참조.

41) 清水洋雄, 前掲論文, 194-195頁.

42) 법무부, 형법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 1992, 153쪽.

(피강요자)의 의사결정·활동의 자유, 인질의 자유 특히 장소선택의 자유와 생명·신체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론이다.⁴³⁾ 또한 강요행위의 객체인 사람(법문에는 ‘제3자’로 표현)은 단순강요죄의 행위객체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의사결정능력이나 의사활동능력을 지닌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는 ‘일반적 의사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삼기 때문이다. 그리고 강요의 상대방은 현재 인질로 잡혀 있는 자가 아닌 다른 제3자이어야 하는데, 자연인은 물론,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국가기관 등과 같은 조직체도 포함된다고 해석한다.⁴⁴⁾

이러한 해석론은 법질서의 통일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질강요행위와 관련된 조약에 법인이 강요행위의 상대방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1983년 6월 3일에 발효된 ‘인질억류범지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 제1호에 의하면, 인질억류범죄란 ‘제3자 즉 국가, 정부간 국제기구, 자연인, 법인 또는 집단에 대해 인질석방을 위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조건으로서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강요할 목적으로 타인을 억류 또는 감금하여 살해, 상해 또는 계속 감금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인이 인질강요의 상대방에 포함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인질강요죄에 대한 위와 같은 지배적 해석론은 일반 강요죄의 해석론과의 논리적 정합성을 상실하고 있다. 즉, 인질강요죄를 체포·감금죄 또는 약취·유인죄와 강요죄의 결합범으로 본다면, 인질강요죄에서 강요행위는 단순강요죄의 강요행위와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인질강요죄의 객체에는 법인 등과 같은 조직체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면서도, 강요죄의 객체인 ‘사람’에는 의사의 자유를 가질 수 없는 법인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⁴⁵⁾ 또한 해석론의 지배적 입장

43) 권오걸, 앞의 책, 108쪽; 김성돈, 앞의 책, 125쪽; 박상기, 앞의 책, 109쪽; 배종대, 앞의 책, 215쪽; 오영근, 앞의 책, 164쪽; 이재상, 앞의 책, 152쪽 등.

44) 권오걸, 앞의 책, 109쪽; 김성돈, 앞의 책, 126쪽; 김일수, 앞의 책, 275-276쪽; 김일수/서보학, 앞의 책, 131쪽; 박상기, 앞의 책, 112쪽; 배종대, 앞의 책, 215쪽; 이재상, 앞의 책, 152쪽; 이정원, 앞의 책, 140쪽; 정영일, 앞의 책, 117쪽 등. 다수의 교과서에서 강요의 ‘상대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범죄행위의 공격대상을 의미하는 ‘객체’와 범죄행위의 ‘상대방’이라는 표현은 동일한 의미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45) 김성돈, 앞의 책, 122쪽; 김일수, 앞의 책, 268쪽; 배종대, 앞의 책, 210쪽; 이재상, 앞의 책, 147쪽; 이정원, 앞의 책, 132쪽 등.

이다. 이러한 해석론의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은 인질강요죄에서 법인이 객체(피해자)가 된다면, 단순강요죄에서도 법인에 대한 강요, 즉 법인이 객체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인질강요죄 혹은 단순강요죄는 폭행, 협박을 통한 권리행사의 방해 혹은 의무 없는 일의 요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이고,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를 통한 공포심을 야기한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양 범죄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해악을 고지한 협박자는 민사분쟁의 해결, 법적 책임의 회피 등 구체적으로 표출되지 않지만 피협박자의 작위 혹은 부작위를 요구하는 내심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협박죄도 강요죄와 마찬가지로 ‘의사결정의 자유’뿐만 아니라 ‘의사활동의 자유’의 침해라는 속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질강요죄 또는 단순강요죄와 마찬가지로 협박죄에서도 법인을 행위의 객체로 인정하는 해석론⁴⁶⁾이 더욱 자연스러운 것이며, 상호 정합성을 유지하는 길이다.

3. 죄수론의 정합성

나아가 법인에 대한 협박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대법원의 입장에 따를 때, 죄수판단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사례4〉 갑은 ‘A법인의 비리를 언론에 고발하여 회사를 망하게 만들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팩스로 A법인에 보냈다. 팩스를 담당하는 A법인의 말단직원 을이 그 내용을 보고 공포심을 느낀 상태에서 과장 병에게 보고하였다. 보고를 받은 과장 병도 놀라서 대표이사 정에게 직접 보고를 하였고, 대표이사 정이 경찰에 신고하였다.

<사례4>의 경우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제3자인 법인과 밀접한 관계가

46) 강요죄에 있어서 ‘인질강요행위 등 처벌법’에서 범죄의 객체인 ‘제3자’에 법인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을 피해자로 하는 협박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도 같은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河村博, 法人等に対する脅迫といやがらせ, 商事法務 1122号, 1987, 33頁).

있는 자연인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할 것이다. 따라서 법인의 기관인 정만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갑의 협박행위는 을과 병에 대해서 각각 협박죄의 미수범이 성립하고, 정에 대해서는 협박죄의 기수범이 성립할 것이다. 그리고 성립된 각각의 범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한 죄수판단일 것이다. 왜냐하면 의사결정의 자유는 전속적 범의이므로, 다수인이 그들의 범의를 침해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의 경우 과연 3명의 피해자에 대한 범죄에 대한 고의를 가졌는가라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면과 3개의 범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정책적인 면을 고려할 때, 하나의 협박죄만을 인정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대법원이 다른 사안⁴⁷⁾에 따르면, 피고인의 협박행위는 구체적으로 3개로 구분된다. 즉, 횡령행위에 대한 책임추궁을 면하기 위하여 법인의 비리를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팩스를 본사에 보내 협박한 행위, 회사의 임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고발문서를 보내겠다고 전화로 협박한 행위, 그리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합의서 작성 즉시 잔액을 입금하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팩스로 보내 서명하도록 한 협박한 행위이다. 대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에 따라 각 행위의 범죄성립여부를 판단해 보면, 우선 첫 번째 행위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협박에 해당하고, 판례의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누가 팩스를 받았는지 혹은 팩스를 받은 사람이 해약의 고지를 인식하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협박죄의 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행위는 해약의 고지를 받은 상대방의 인식이 있었으므로 협박죄의 기수에 해당한다. 그리고 마지막 행위는 협박을 통하여 금전의 요구가 있었지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혹은 ‘재산상의 손해발생’이 없었으므로 공갈죄의 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해약의 고지와 세 번째 해약의 고지를 직접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판례에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지만, 만약 이들이 다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3개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3개의 협박행위에 대한 개별적 범죄성립 여부, 나아가 성립된 범죄간의 죄수관계를 판단하지 않은 채 법인의 임원,

47) 본 사안은 대법원 2010.7.15. 선고 2010도1017 판결의 사안으로, 자세한 사실관계는 각주 4) 참조.

즉 사람에 대한 하나의 협박죄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접근이 타당한 해석론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례3>이나 대법원 판례 사안에서, 법인에 대한 협박죄를 긍정한다면 죄수관계에 있어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협박죄의 객체를 직접 해약의 고지를 받은 사람이 아닌 법인으로 본다면, 연속범인 하나의 협박죄를 인정함으로써 족할 것이다. 즉, 단일한 범죄의사로 동일한 피해자인 법인에 대한 법익의 침해가 있고, 침해방법이 동일하고, 시간적 근접성이 있으므로 연속범으로 일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법인을 협박죄의 객체로 본다면 죄수문제를 간명하고 사안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IV. 협박의 대상과 가해 대상의 구별 문제

법인에 대하여 협박죄를 인정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협박의 대상과 가해의 대상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⁴⁸⁾이 있다. 해약고지의 상대방이며 공포심을 느끼게 되는 자로서 협박의 대상과, 고지된 해약으로 침해될 법익의 주체인 가해의 대상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겠다고 했을 때 가해의 대상은 법인일 수 있지만, 법인이 직접적인 협박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해약의 고지는 법인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에게 가능한 것이므로 협박의 대상은 자연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우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감정의 침해위험인지 자유에 대한 침해 위험인지를 구별해야함을 지적할 수 있겠다. 나아가 이러한 구별요구는 법인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겠다고 했을 때, 가해의 대상은 법인일 수 있지만, 법인이 직접적으로 협박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인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에게만 이러한 해약의 고지가 가능할 뿐이라는 것이다. 달리 말해 공포심을 느끼거나, 법적 안전감이건 의사의 자유이건 이에 대한 침해의 위험을 느끼는 자는 자연인이라는 것이다.

48) 한영수, 앞의 논문, 351쪽.

하지만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향해진 법인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왜 그에게 공포심을 야기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대표이사 개인으로서의 두려움 혹은 법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느끼는 공포심이 아니라, 법인과 동일시되는 기관, 기관동일체이론에 따를 때 법인 그 자체인 기관이 느끼는, 즉 법인이 느끼는 두려움인 것이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A식료품회사에 전화를 해서 만약 10억을 자신에게 송금하지 않으면 회사가 만드는 음료수에 독약을 혼입하고 이를 알려 회사에 치명적인 손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러한 경우에 어떤 대표이사는 ‘회사가 큰일 나겠다’고 생각했고, 어떤 대표이사는 오히려 ‘이 기회에 법인이 20억을 요구했다고 거짓말을 하고서 10억은 내가 챙겨야겠다.’고 생각했다면, 위 피고인의 해악의 고지는 일반인이 공포심을 느끼기에 족한 해악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 지 단언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법인이며, 협박의 상대방은 개인인 대표이사 혹은 법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개인으로서 대표이사가 아니라, 법인과 동일한, 조직체의 구성원으로 대표되는 법인에 대한 해악 고지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안에서 해악의 고지가 협박으로 충분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개인이 느끼는 공포심이 아니라, 법인 자체가 그의 영업의 자유나 회사의 거래와 관련한 영역구축의 자유에 대해 느끼는 위협감인 것이고, 이렇게 보면 해악이 도달한 상대방이 누구이며, 그가 이에 대해 어떠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와 무관하게, 법인 자체의 자유를 잣대로 한 객관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V. 맺는 말

법인에 대한 협박죄의 성립을 부정한 대법원 판례의 타당성과 법인에 대한 협박죄의 성립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지금까지의 검토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다. 대법원이 법인에 대한 협박죄의 성립을 부정하며 제시한 형법규정상 체계에 근거한 논거에 대해서는 형법 제정 당시의 편재에 대한 의견교환은 물론 합의된 의견이 도출되지도 않았다는 점, 형법 제정당시와 현재의 변화된 사회

양상을 법해석에 있어서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법인이 협박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단순히 형법전의 편재에 근거한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협박죄의 보호법익과 관련해서도 ‘의사결정의 자유’에서 말하는 ‘의사’의 의미를 심리적 고찰방법이 아닌 규범적 고찰방식에 따라 ‘자기영역구축권’으로 이해한다면 법인도 의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보호법익과 관련한 논거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마지막으로 ‘공포심의 야기’를 단순히 두려워하는 감정의 유발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침해될 것에 대한 우려의 야기로 이해한다면 법인도 공포심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협박행위의 개념이해도 비합리적인 선판단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법원의 입장에 따라 협박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를 직접 해약을 고지를 받은 자연인의 법인과(밀접한) 관련성, 특히 법인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을 기준으로 한다면, 해약의 고지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우연적인 사정에 따라 협박죄의 성립범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안정적이고 사안에 적합한 결론에 이를 수 없다. 즉, 해약의 고지를 법인의 기관이 받은 경우에는 협박죄의 기수가 되고, 법인의 일반 직원이 대상이 된 경우는 협박죄의 미수에 그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한편 인질강요죄에서 강요의 객체에는 법인이 포함된다고 하면서, 강요죄에는 법인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론의 지배적인 입장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인질강요죄에서 강요의 객체에 법인이 포함된다고 한다면, 강요죄의 객체에도 법인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나아가 양 죄와 협박죄는 모두 ‘의사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협박죄의 객체에도 법인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관된 해석일 것이다.

그리고 협박죄의 객체를 자연인으로 보는 대법원의 입장에 따른다면, 동일한 내용의 하나의 해약을 여러 사람에게 고지(협박행위)한 경우, 협박자의 주관적 관점이나 형사정책적 관점에 비추어 불합리한 죄수판단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죄수판단의 불합리성도 협박죄의 객체를 법인으로 봄으로써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협박죄와 관련한 기존의 해석론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회현실에 상응한 법해석·적용을 위해서는 법인 자체를 협박죄의 객체로 인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직접적인 해결책으로 보인다. 나아가 형법각칙의 개별 범죄들 중에서 ‘사람’이라는 구성요건표지에 법인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람(법인을 포함)’이라고 개정하는 입법론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필요한 해석상의 논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서룡, 신형법요의, 법제신보사, 1954.
- 권오걸, 스마트 형법각론, 형설출판사, 2011.
- 김성돈, 형법각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8.
- 김일수/서보학, 새로쓴 형법각론, 박영사, 2009.
-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10.
-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2010.
-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12.
- 이정원, 형법각론, 신론사, 2012.
-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11.
- 정성근/박광민, 형법각론, 삼영사, 2011.
-
- 박달현, 협박죄의 성질과 기수시기에 관한 체계적 고찰, 저스티스 통권 제127호, 2011, 374쪽 이하.
- 임석원, 범죄피해자로서 범인의 본질: 모욕죄와 협박죄를 중심으로, 피해자학 연구 제16권 제1호, 2008, 229쪽 이하.
- 한영수, 협박의 의미와 대상, 형사판례연구 19호, 박영사, 2011, 326쪽 이하.
-
- Amelung, Kunt, Über Freiheit und Freiwilligkeit auf der Opferseite der Strafnorm, Goldammers Archiv für Strafrecht Bd. 146, 1999, 182ff.
- Bergmann, Alfred, Das Unrecht der Nötigung (§240 StGB), Duncker & Humblot, 1983.
- Jakobs, Günther, Nötigung durch Gewalt: Gedächtnisschrift für Hilde Kaufmann, De Gruyter, 1986, 791ff.
- Jakobs, Günther, Nötigung durch Drohung als Freiheitsdelikt: Festschrift für Karl Peters zum 70. Geburtstag, Mohr, 1974, 69ff.
- Kindhäuser, Strafrecht BT II/1, 2. Aufl., Nomos, 1999.
- Lackner, Karl/Kühl, Kristian, Strafgesetzbuch, 22. Aufl., C. H. Beck, 1997.

Schönke, Adolf/Schröder, Horst, Strafgesetzbuch, 25. Aufl., C. H. Beck, 1997.
Timpe, Gerhard, Die Nötigung, Duncker & Humblot, 1989.
Tröndle, Herbert/Fischer, Thomas, Strafgesetzbuch und Nebengesetz, 49. Aufl., C. H. Beck, 1999.
Wallau, Rochus, Der „Mensch“ in §§240, 241, 253 StGB und die Verletzung der Rechte juristischer Person, JR 2000, 312ff.

大谷實, 刑法講義各論(新版第3版), 成文堂, 2009.
大塚仁, 刑法概説(各論)[第3版増補版], 有斐閣, 2005.
大塚仁/河上和雄/佐藤文哉/古田佑紀 編, 大コンメンタール刑法 第11卷(第2版), 青林書院, 2005.
山口厚, 刑法各論(補訂版), 有斐閣, 2005.
山中敬一, 刑法各論(第2版), 成文堂, 2009.
西田典之, 刑法各論(第4版), 弘文堂, 2007.
松宮孝明, 刑法各論講義(第2版), 成文堂, 2008.
須之内克彦, 刑法概説各論(初版), 成文堂, 2011.
林幹人, 刑法各論(第2版), 東京大学出版会, 2007.
中森喜彦, 刑法各論(第3版), 有斐閣, 2011.
青柳文雄, 刑法通論 2 各論, 泉文堂, 1963.
板倉宏, 刑法各論, 勁草書房, 2004.
今田寛, 感情心理学 第三卷・恐怖と不安, 誠信書房, 1975.
今井猛嘉, 刑法における法人の地位, ジュリスト増刊・刑法の争点(第三版), 有斐閣, 2000, 128頁 以下.
但木敬一/坪内利彦/馬場義宣/古田佑紀, 実務刑法(三訂版), 立花書房, 2002, 326頁 以下.
大谷實, 法人に対する脅迫罪の成否(大阪高判昭和61年12月16日の評釈), 法学セミナー 393号, 1987, 135頁 以下.
大塚裕史, 法人に対する脅迫(大阪高判昭和61年12月16日の評釈), 新判例マニュアル刑法II各論(香川達夫/川端博 編), 三省堂, 1998, 55頁 以下.
森本益之, 法人に対する脅迫罪の成否(大阪高判昭和61年12月16日の評釈), 判例時

報 1250号, 1987, 220頁.

松原久利, 法人の刑事責任-自然人を媒介としたアプローチ, 刑法雑誌 41卷1号, 2001, 39頁 以下.

松澤伸, 法人に対する脅迫強要罪の成否(二·完), 早稲田法学 80卷4号, 2005, 69頁 以下.

野村稔, 脅迫罪, 刑法学 4 <各論の重要問題>(西原春夫/藤木英雄/森下忠 編), 有斐閣, 1977, 102頁 以下.

前田雅英, 法人に対する脅迫罪, 最新重要判例250 刑法, 弘文堂, 2011, 142頁 以下.

清水洋雄, 被害者としての法人, 日本法学 第76卷 第4号, 2011, 179頁 以下.

板倉宏, 企業犯罪の理論と現実, 有斐閣, 1975.

坪井宣幸, 実務刑事判例評釈 [30], 警察公論52卷1号, 1997, 123頁 以下.

河村博, 法人等に対する脅迫といやがらせ, 商事法務1122号, 1987, 30頁 以下.

Notwendigkeit und Legitimität der Anerkennung der Bedrohung gegen die juristische Personen

Dr. iur Hyun-Jo Kim*

Nach der Rechtsprechung und h. M. in Korea kann keine juristische Personen als ein mögliche Handlungsobjekt der Bedrohung angenommen werden. Darin steht ins besondere die Ansicht, daß kein psychologisch verstandener Wille einer juristischen Person zukommt. Aber die Rechtsprechung und h. M. nehmen an, daß Angriffe gegen rechtliche garantierte Freiheit als das Nötigung oder Bedrohung charakterisierende Unrecht allgemein angesehen werden soll.

In dieser Lage hat die vorliegende Arbeit unternommen, Notwendigkeit und Legitimität der Anerkennung der Bedrohung gegen die juristische Personen zu begründen. Vor allem hat diese Untersuchung das systematisches Argument, das Verständnis des Rechtsguts und des Bedrohugsbegriffs der h. M und Rechtsprechung kritisch analysiert.

Die vorliegende Arbeit hat versucht, die Überlegenheit der normativierenden Lösung gegenüber der h. M und Rechtsprechung zu rechtfertigen, besonderes durch die Analyse der Gesetzgebungsgeschichte, des Willensbegriffs, der Bedeutung des Rechtsguts, „Willensfreiheit“ und schließlich der Konkurrenzlehre.

Im Ergebnis wird es gezeigt, daß die Genötigte oder Bedrohte im Sinne des §§ 383 Abs. 1, 324, und 336 nicht nur menschliche Person, sondern auch die sogenannte Organe als solche, die juristische Person sind.

Und um die hermeneutische Streitigkeit und Schwierigkeit zu beseitigen, die vorliegende Arbeit hat vorgeschlagen, die Vorschriften der Nötigung und der

* Forschungsinstitut von Rechtswissenschaft an der KNU Law School

Bedrohung teilweise zu ändern, also vom „Menschen“ zu „Menschen (einschließlich der juristischen Person)“.

❖ Schlagwörter : juristische Person, Bedrohung, Nötigung, Organ, Willensfreiheit